

##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 문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본계획 중 다른 법령의 개정 에 따라 용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가 직권으로 기본계획 중 인력자원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계획 중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주무부장의 변경명령에 따라 실시계획 중 물적자원에 관한 통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 문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이 잘못된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의약품생산업체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甲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다.
- ㄴ. 자연과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들로 구성된 감염병 연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였다.
- ㄷ. 일본의 법령에 따른 기술면허를 취득한 51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다.
- ㄹ.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방송업체에 근무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40세의 대한민국 국민인 丙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3.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업체의 장은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한 업체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문 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물자의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주무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ㄴ. 주무부장관의 비축명령에 따라 물자를 비축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면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ㄷ. 비축대상물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업체 비축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문 5. 甲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한 A 방송사에 종사하는 자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甲을 중점관리대상인력으로 지정하였고, 지정 당시 甲은 인력의 참여 협력에 문서로 동의하였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방송사가 도산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를 대체 지정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도 甲에게 참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A 방송사의 장에게 비상대비업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명할 수 있다.
- ④ 甲이 협력 요청에 따라 3일간 인력의 참여 협력을 한 경우 甲에게 식비·숙박료·교통비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 6.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시관리훈련 실시명령을 발령한 주무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훈련을 계속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해제명령을 발령한다.
- ② 도상훈련의 경우에 연(年) 10일간 훈련이 가능하다.
- ③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그 훈련을 필요로 하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주무부장관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동시관리훈련은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에 우선한다.

문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정부연습은 (가) 이/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나) 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2개 부문 이상에 걸치는 자체연습의 경우에는 (다) 이/가 연습의 방법·기간 등을 정하여 (라) 의 승인을 받아 실시명령을 발령한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②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③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④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문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의 방법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부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② 국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유실·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하지 아니한다.
- ③ 훈련대상물자 중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훈련이 끝난 당시의 전신전화 요금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④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문 9. 다음 사례에서 ㉠ ~ ㉣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에 위반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갑자기 A 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 B 병원과 이에 종사하는 의사 甲과 간호사 乙, 丙을 포함한 중점관리대상인력에 대하여 동시관리훈련을 2021. 5. 14. 1일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때 훈련실시명령은 B 병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발령하였다.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되자, ㉡ A 광역시의 시장은 인력훈련통지서와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발급하여 2021. 5. 8. B 병원의 장 丁에게 한꺼번에 직접 교부하였다. 이후 丁은 인력훈련통지서를 甲과 乙, 丙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 훈련실시일인 2021. 5. 14. 동시관리훈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 丙은 현재 국외여행 중임을 이유로 해당 훈련에 참가할 수 없음을 丁에게 신고한 후 해당 훈련에 불참하였다.

훈련실시일에 甲과 乙은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였고, 훈련에 제출된 의료기기가 훈련으로 인하여 훼손되었다.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丁은 이를 보상받고자 2021. 6. 10.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한편, 甲과 乙에게 훈련 당일 식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 |        |        |
|--------|--------|
| ① ㉠, ㉡ | ② ㉠, ㉢ |
| ③ ㉡, ㉣ | ④ ㉢, ㉣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에 관한 각 중앙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ㄴ. 중앙민방위협의회는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ㄷ. 중앙민방위협의회는 분과위원회로서 재난구호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분과위원장이 된다.

ㄹ. 중앙민방위협의회 소속으로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 읍·면·동협의회를 각각 둔다.

- |           |           |
|-----------|-----------|
| ① ㄱ, ㄴ    | ② ㄷ, ㄹ    |
| ③ ㄱ, ㄴ, ㄷ | ④ ㄱ, ㄴ, ㄹ |

문 11. A 시의 시장 甲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단독주택이 아닌 X 건물(「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 乙에 대해 민방위 계획에 따라 비상대피시설 설치의 민방위 준비를 명하였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甲의 민방위 준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대상이 된다.
- ㄴ. 甲은 민방위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X 건물의 관계 지역에 출입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ㄷ. 甲이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한 경우 흰색 바탕의 안내표지판과 빨간색 바탕의 유도표지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ㄹ. 甲은 민방위 준비에 따라 X 건물에 설치한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문 12. A 군 B 면의 관내에는 통·리 민방위대(X)와 직장 민방위대(Y 및 Z)가 편성되어 있다. 민방위기본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Y를 둔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Y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현재 X의 대장이 심신 허약으로 인해 현장 지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B 면의 면장이 지정한 자를 X의 대장으로 할 수 있다.
- ③ A 군의 군수는 같은 건물 안에 편성되어 있는 Z를 Y와 함께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그 직장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B 면의 면장이 X와 인접한 통·리 민방위대를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지역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은 각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 중에서 B 면의 면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조직 및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역 민방위대 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장은 그 지원서를 거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② 민방위기술폮원대는 수방·방공·의료·전기·통신·토목·건축·화생방 등의 기술을 가진 민방위 대원 중에서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선발한 사람으로 편성한다.
- ③ 통·리 민방위 대원과 민방위기술폮원 대원 및 직장 민방위 대원은 중복하여 편성하지 않는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직장 민방위대가 운영실적이 부실하거나 계속 들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편이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문 14. 민방위기본법령상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원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ㄴ.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여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한다.
- ㄷ. 중앙관서의 장이 「민방위기본법」이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는데 그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재위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ㄹ.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수습 및 복구조치로서 피해시설을 응급복구 하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습 및 복구 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1. 예비군법령상 훈련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가) 시간 이내에서 실시한다.
- 국방부장관은 (나) 에 대하여는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 수임군부대의 장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한 경우 관할지역 외의 예비군대원은 훈련소집일 (다) 일 전까지 전자 문서 또는 수임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원에 대비한 불시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라) 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u>(가)</u>	<u>(나)</u>	<u>(다)</u>	<u>(라)</u>
①	160	항공교통관제사	3	전화 또는 방문 통보
②	150	경찰관	5	소집통지서의 전달
③	160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5	전자문서 전달
④	150	외국에 여행 중인 사람	3	전화 또는 방문 통보

문 22. 예비군법령상 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예비군이 출동하여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역에서 무장공비의 소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그 임무를 수행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예비군은 민방위 업무를 지원할 때에 예비군이 출동하지 아니하고는 민방위 업무를 지원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다.
- ③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우에 그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관으로 본다.
- ④ 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무장을 위한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을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문 23.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 2. 1. 무장폭도가 강원도 A 지역에 있는 민가에 침입하였다. 무장폭도를 소멸하기 위해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수탁경찰서장 甲은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 乙 소유의 주택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그 주택의 가격을 1억 원으로 적은 손실증명서를 乙에게 발급하였다.

- ① 甲은 그 조치 내용을 즉시 수임군부대의 장 및 강원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② 乙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강원도지사 및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이 2021. 3. 10. 乙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2021. 5. 10.까지 보상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지체 없이 乙에게 보내야 한다.
- ④ 乙이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2021. 3. 31. 받은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2021. 4. 30.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문 24. 甲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甲은 그 부상으로 인해 1개월간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고, 甲의 유족으로는 乙만이 있다. 예비군법령상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甲에게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액과 지급 절차에 준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을 공제한다.

ㄴ. 乙은 보상 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구분된다.

ㄷ. 乙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ㄹ. 수임군부대의 장은 甲의 사망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ㄴ, ㄷ, ㄹ

문 25. 예비군법령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2021. 3. 10. 수탁경찰서장의 동원명령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甲은 불가피하게 민간의료시설에서 3일간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지급 없이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로 이송되었다. 甲은 민간의료시설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하는 바람에 50일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2020년 전국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은 10만 원임)

- ① 甲은 민간의료시설에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해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수탁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청구서를 보내야 한다.
- ② 관할 군사령관이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甲에 대한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치료비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 ③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업보상금은 400만 원이다.
- ④ 甲이 휴업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여 수탁경찰서장에게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문 26. 예비군법령상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뿐만 아니라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기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주관하여 1년에 한차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각군 예하 예비군부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행정안전부장관 甲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2021. 6. 14.부터 2021. 6. 17.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 A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B와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은 2021. 6. 4.까지 A의 장 및 B의 장에게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 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B가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B가 부담하나, 만일 B가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이라면 甲이 부담할 수 있다.
- ③ A의 장과 B의 장은 재난대비훈련 실시 결과를 2021. 6. 30.까지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甲은 재난대비훈련 평가의 결과를 2021. 7. 20.까지 A의 장 및 B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甲 ~ 丁의 지위와 권한 등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 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장은 甲이 된다.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이어 다음 순위로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丙이다.
- 丁은 화재·위험물 사고,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의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이다.

— <보 기> —

- ㄱ. 甲은 해외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丙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의 차장이 된다.
- ㄴ. 乙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사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조정(중앙 안전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외)의 결과를 甲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ㄷ. 丙은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에 한정함)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되며,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乙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乙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ㄹ. 丁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 되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ㄷ, ㄹ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실무위원회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구이다.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행정안전부의 안전정책실장, 재난관리실장, 재난협력실장의 임기는 2년이다.
- ②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 및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재난긴급대응단은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 임무수행에 관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또는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통제를 따른다.
- ④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안전상황실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등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재난상황을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재난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이 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위기경보의 발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한 경우에는 위기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 ② 위기경보의 발령대상 재난은 사회재난을 제외한 자연재난을 말한다.
- ③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④ 재난의 복구 등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경계 경보를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응급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우선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 ㄹ.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진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의 요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예보를 실시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 ②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 ③ 지역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하기 위하여 헬기를 운항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헬기운항통제기관의 운항 승인을 얻어야 하고, 헬기 운항 후에는 지체 없이 헬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사항을 헬기운항통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 35. A도 B군에서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B군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그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B군의 군수는 군(郡)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되어 군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B군의 군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 신고를 받은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피해상황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ㄴ. B군의 군수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ㄷ. B군의 군수는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의 장에게 인력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ㄹ. 군대책본부의 본부장이자 B군의 군수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법령 I - 헌법**

- 문 1.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도록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진정소급입법은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 ③ 종전 「약사법」에 의하여 약국개설 등록을 받은 장소에서 법 시행일 후 1년 뒤에는 기존 약국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미 개설 등록된 기존 약국의 효력이나 이제까지의 약국영업과 관련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부인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3조제2항에서 의미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 ④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무가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원칙으로부터 도출되지 않는다.

문 2.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하여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 ②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 ③ 합헌한정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권을 행사할 때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위헌이 될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규정의 의미를 한정하여, 위헌이 될 가능성을 제거하는 해석기술이기도 하다.
- ④ 「군인사법」 제48조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 내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문 3.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 ② 퇴직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 ③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을 법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된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 부칙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 ④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은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문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담배사업법」에서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구「담배사업법」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본문 중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③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때에는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④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다른 전원개발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 5.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환경권은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 ②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 ③ 환경권의 보호대상인 환경은 자연환경을 의미하고,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내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 ④ 사법적(私法的)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문 6.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최루액 혼합살수방법은 이미 법률 및 대통령령에 위해성 경찰장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등을 실제 사용할 때 그 운용하는 형태의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의 하나로 볼 수 없고,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 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 ③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 관리법」 제63조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일 뿐이고, 위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문 7. 사면·감형과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가능하다.
- ② 특별사면은 형 집행을 면하게 할 수 있을 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는 없다.
- ③ 일반사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 ④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문 8.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피고인 의사의 확인을 위한 안내서를 송달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 ㄴ. 구「방송법」 제10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 ‘의견제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의견제시를 규정한 위 법률조항은 그 자체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박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 ㄷ.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하면서 부칙에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 시행일이 아니라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 이후에 비로소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ㄹ.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이 인용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선임된 국선대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 ① ㄱ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문 9.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으나,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만 될 수 있다.
- 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17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국회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 ④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한다.

문 10. 국회 교섭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에 20명 이상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지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는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 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 의원에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문 11. 헌법기관의 규칙제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 12. 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는 소송만을 나열한 것은?

- ① 교육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 ②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 ③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특허소송
- ④ 시·도지사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송,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에서 군사에 관한 간첩죄로 사형을 선고한 경우

문 13. 계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 ③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 ④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문 14.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간행물 판매업자에게 간행물 가격의 10%까지 소비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해당 조항에 대하여 ‘출판업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 ② 식품접객업소에서 배달 등의 경우에 합성수지 재질의 도시락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조항에 대하여 ‘도시락 용기 생산업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 ③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해당 조항에 대하여 ‘의료소비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 ④ 대학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그 면제한 수업료 등의 반액을 대학에 보조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에 대하여 ‘국외 대학에 취학한 자녀를 둔 국가유공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문 15.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헌법 제117조, 제118조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다.
- 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권이나 주민소환청구권은 그 성질상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과는 다른 것이어서 이를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는 없다.
- ㄷ.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영토·영해·영공을 자유로이 관리하고 관할구역 내의 사람과 물건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 ㄹ.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구「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 규정의 감사권은 그 대상과 범위가 한정적인 제한된 감사권이 아니라 사전적·일반적인 포괄감사권이라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